



매일노동뉴스

금속산업연맹 98년 평가와 99년 활동계획

노재열

금속산업연맹정책기획실장

지난 사업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것은 이후 사업을 보다 올바르게 수립하고 지난 사업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제출되는 것이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부족한

자료일 수밖에 없다. 우선 평가에서 1998년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으로 줄임) 사업의 내용이 단순히 1년 동안의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고, 내용 또한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제한된 지면에 그 내용을 모두 담기는 어렵다. 그리고 1999년 연맹사업을 정리하는 데서도 공식

자료밖에는 부분적인 의견개진 정도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참고해서 읽어주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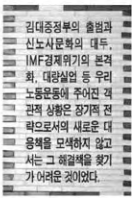
1. 1998년 연맹 사업평가

1998년 연맹의 실제 조직활동은 10개월이 채 못된다. 2월 15일 창립 이후 지역본부까지 구성된 시기는 4월초였다. 본격적인 연맹활동이 4월중순경부터 전개되었다면 약 8개월 동안의 사업을 전개한 셈이다. 이미 일정상 한계를 안고 출발한 것이지만 그 짧은 시기에 비해 연맹 전체 사업에 대한 준비는 매우 치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창립추진위 시절인 1997년 9월29일~12월 22일까지 7차례의 통합추진위원회의, 12월 1일~12월 14일까지 14차례, 164개노조 1,375명의 노조간부에 대한 3조직 지도부 순회간담회, 1998년 1월 9일~2월 14일까지 5차례 준비위원회의를 거치면서 98년 2월 15일 창립대회와 동시에 입단부 방침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1998년 한 해에 일어난 일을 먼저 정리해 보자. 연맹이 맞이한 1998년은 조직내부로는 2월 15일 연맹창

립, 정리하고 잠정합의로 인한 민주노총 지도부사퇴와 3월31일까지 단병호 위원장 민주노총비대위 위원장 겸임, 5월총파업, 중앙교섭 전개, 9월을 넘기면서까지 지부한 입단부 전개, 단병호 위원장 구속, 하반기 본격적인 구조조정 부정전개, 12월부터 연맹 2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준비 등 바쁘게 물



아치는 사업의 연속이었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정리하고 잠정합의, 합의안부결, 지도부사퇴, 이갑용위원장 선출, 명동성당 농성투쟁, 노사정불참(99년 2월 탈퇴) 등 민주노조운동 전반에 걸쳐 그때그때 대응하기에도 바쁜 한 해였다.

밖으로는 김대중정부의 출범과 신노사문화의 대두, IMF 경제위기의 본격화, 대량실업 등 우리 노동운동에 주어진 객관적 상황은 장기적 전략으로서의 새로운 대응책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1) 평가의 기본인식

1998년 사업평가를 놓고 연맹이 정리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조직 안으로는 당연한 사안에 대한 대

용에도 급급한 처지였던 반면, 조직 밖의 객관적 상황은 장기 대적을 모색해야 한다는 모순된 상황이 바로 1998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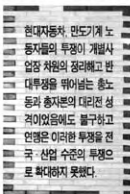
물론 연맹은 1998년 창립원년을 열면서 조직 안의 통일성과 일사불란한 조직활동과 투쟁사업 전개, 이에 근거한 산별노조로의 준비와 실천을 결의하였다. 또한 정세인식에서도 IMF경제위기 국면과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새로운 노사관계 설정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과상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정부와 자본측의 정리해고 바람에 밀려 실질적인 자리매김은 하지 못하고 당면 사안

에 대한 대응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 결국, 통합조직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20만 조합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새 한 해를 보내 버린 것이다.

2) 투쟁 - 일단투를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제 연맹이 수행한 투쟁사업은 매우 가열차게 진행되었다. 4월부터 본격화된 부당노동행위사업주 구속촉구투쟁, 경총항의 투쟁, 고

용보장 투쟁과 만도기계 및 기아자동차 투쟁, 인명지도부 명동성당농성 투쟁, 5월1일 노동절 투쟁으로 시작된 세 차례의 총파업투쟁(5/27~28, 7/14~15, 7/22~24)은 상반기 투쟁의 획을 그으면서 하반기 구조조정투쟁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투쟁 중 현대자동차만도기계 노동자투쟁과 중앙교섭투쟁을



주요하게 정리하여 보자.

①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노동자투쟁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38일 동안의 공장점거 파업투쟁과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투쟁은 1998년 연맹차원에서 전개된 투쟁의 성

격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중요한 투쟁이었다.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투쟁이 개별사업장 차원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뛰어넘는 총노동과 총자본의 대리전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맹은 이러한 투쟁을 전국·산업수준의 투쟁으로 확대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통합직후 아직 정비되지 못한 조직력의 한계와 더불어 연맹차원의 전국투쟁전선 구축을 끊임없이 시도하였으나 5월부터 거는되는 투쟁 속에 대중투쟁 동력이 많이 약해졌고, 노사정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별교섭을 추구하는 한, 그리고 총노동과 총자본의 교섭구조를 인정하는 한 중앙교섭은 필연이다.

위원회를 둘러싼 민주노총 진영안의 논란 속에 전국적인 투쟁을 추스릴 수 있는 중앙지도력의 약화가 그 이유였다.

더구나 연맹의 주요한 사업방침으로서 제기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를 현대자동차 투쟁을 통해 전국생점화하고 연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정치쟁점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조차 놓쳐버리는 아쉬움을 남기고, 오히려 자본과 언론의 집중적인 여론공세에 밀려 현대자동차 잠정합의안마저 왜곡되는 결과를 남게 된다. 즉, 연맹이 단위노조까지 적극적으로 관장하는 총체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맹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

계는 분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② 중앙교섭

연맹 임단투쟁가 가운데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특히 연맹 중앙교섭에 대한 평가 가운데 기초자료에 대한 정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것은 연맹중앙교섭을 1998년 1년 동안만 진행하고 다음부터는 다른 어떤 교섭이라는 식의 편의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별교섭을 추구하는 한, 그리고 총노동과 총자본의 교섭구조를 인정하는 한 중앙교섭은 필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맹은 1999년에도 98년의

중앙교섭의 교훈을 딛고 중앙교섭을 시도하고 있다.

3월30일 중앙교섭요구와 4월28일까지 5차례에 걸친 중앙교섭요구투쟁, 4월28일 1차 조정신청과 5월6일부터 대각선교섭으로의 전환 등의 일정으로 볼 때, 정신없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 중앙교섭에 대한 조합원 인식공유가 미흡하였고, 실질적인 위력을 갖는 교섭권위임과 투쟁이 배치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4월30일까지 106개노조가 교섭권을 위임하고 연맹 방침에 따라 67개 노조의 1차 조정신청은 투쟁을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일정을 촉박하게 잡고 교섭준비를 해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1998년 정세인식에 기인한다.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과 관련한 총자본의 공세에 적극 대처하고 총노동의 투쟁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연맹의 방침이었다. 따라서 현장동력을 추동하기 위한 교섭일정을 빨리 배치하고,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투쟁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섭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중앙교섭 본래의 취지보다는 실무적인 준비 미흡과 그에 따른 성과 부족에 대한 현장 조합원의 실망이 매우 컸다. 너무 급하게 설정한 연맹중앙의 일정에 단위노조가 따라오기

에 급급하였고, 실무적인 교섭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위노조 간부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였다.

이와 함께 자본측은 김대중 정부와 짜고 교묘한 노조탄압과 분열공작을 벌이면서 우리 노동진영을 무용하였다. 바로 '노사정위 합의'니, '노정합의'니 하면서 실제 노동진영 동력을 분산시키고 기만하였다. 결국 5월27일~28일 총파업투쟁까지 연맹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투쟁을 벌이지만 노동진영 전체의 일사불란한 투쟁대오가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바로 연맹중앙교섭에서 요구한 단위노조 교섭과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민주노총 차원의 정리해고 철폐투쟁으로 나아가면서 단위노조가 제도개선투쟁까지 떠안는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이다. 즉, 단위노조에서는 정리해고 저지 투쟁전선을 튼튼하게 치고, 연맹과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철폐투쟁이라는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한다는 구분이 있어야 하는데도 삼급단체의 요구가 단위노조 교섭과제로 멀어지면서 실질적인 교섭과제의 혼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섭권위임 결의 노조 124개, 조정신청노조 106개노조 등 연맹방침에 따른 투쟁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가운데 5월 27일~28일 1차 총파업투쟁, 7월14일~16일 2차 총파업투쟁, 7월22일~24일 3차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면서 연맹조합원수 대비

연인원 50만 명이 참가하는 부쟁을 전개하였다.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교섭을 통한 부쟁시기의 집중은 매우 중요한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3) 조직

1998년 조직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도

집행력의 강화와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이 제기된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지도집행력의 경우, 창립원년의 사업으로서 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실제 중앙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가 성원이 안되어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무금 납부율

75%, 부쟁기금 납부율 24%에 그치는 등 책임성 있는 논의와 사업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반기가 부쟁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하반기에는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기획회의를 운영하면서 연맹조직활동의 전망을 어느 정도 수립한 성과가 있었다. 2000년 10월까지 산별노조를 건설한다는 방침과 이를 위한 현장조직활동의 강화는 이후 연맹 조직활동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2. 99년 사업기조와 방향

1) 사업기조

연맹은 1999년 한해를 '총력투쟁의 해'로 삼정하고 있다. '정리해고중단,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쟁취'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구조조정 관련

구조조정관련 대응은 결코 단위노조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용문제를 발생시킨다. 총자본의 산업구조조정과 정은 개별사업장 차원을 벗어난 국가경제구조의 조정과정이기 때문이다.

총력투쟁을 배치하면서 집단협과 연계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부쟁은 연맹이 책임지고 전개하는 전국적인 투쟁이다. 구조조정관련 대응은 결코 단위노조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용문제를 발생시킨다. 총자본의 산업구조조정과정은 개별

사업장 차원을 벗어난 국가경제구조의 조정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리 노동자의 대응 또한 총노동의 대응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맹방침에 따라 개별 단위노조는 투쟁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총력투쟁을 위한 다양한 교섭과 전술을 배치해 나가야 한다.

교섭준비는 단위노조의 일정을 최대한 공동으로 배치하고 연맹 중앙으로 모아내는 사업을 배치한다. 요구내용은 노동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동시에

파생되는 단위사업장의 정리해고반대 등 고용불안에 대해 강고한 투쟁전선을 구축하고 투쟁해 나간다. 연맹은 단위 노조의 투쟁을 바탕으로 정부와 자본측에 대해 전국적인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 하에 강력한 투쟁계획을 마련한다. 고용유지 방안으로 주40시간 법정 노동시간 단축방안 등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한다.

총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요구의 통일과 더불어 공동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 중앙차원의 투쟁본부와 지역별 투쟁본부 구성, 공동투쟁일정 설정 등 연맹차원의 일사불란한 방침 하에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을 위한 교섭준비로서 부문별·지역별 집단교섭도 배치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 공동요구·공동교섭을 통한 투쟁일정을 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맹은 대정부/대자본 중앙교섭을 제기하고 총력투쟁을 준비한다. 정부나 자본측은 쉽게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단위노조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분열작업을 자행해 줄 것이다. 노동진영 역시 이 점을 예상하고 중앙교섭과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교섭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투쟁일정을 모아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단위노조는 실질적인 교섭진행을 위한 대각선교섭을 상정하고 동시 병행하여 진행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맹중앙

으로의 교섭권위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섭권 전면위임 방침이 세워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2) 사업방향

3월27일 연맹임시대의원대회에 제출되는 연맹사업방침 중 총괄사업방침의 4대 사업방향을 발췌하여 아래에 참고로 실는다.

① 연맹창립 2년차인 1999년은 조직 내 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일사불란한 지도, 집행력을 구축한다. 창립 원년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조직 단결의 과제를 중요하게 설정한다. 창립원년인 1998년도가 이전에 전개해 온 각 조직간의 통일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전망을 열어나가는 조직활동으로 더욱 튼튼한 지도력과 집행력이 요구된다.

② 당면한 구조조정투쟁으로부터 총투쟁전선을 구축하고 연맹 중앙의 통일적인 교섭방침, 투쟁방침 하에 일사불란한 투쟁을 전개한다. IMF 경제위기 속에 더 이상 단위노조의 교섭력으로는 현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이 1998년 투쟁에서 분명하게 증명되었다. 총투쟁전선 구축만이 총자본의 탄압을 돌파하고 생존권을 쟁취할 수 있으며, 고용안정과 생계보장을 위한 임금상 쟁취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우리 노동자의 요구이다. 대정부/대자본에 대한 중앙교섭 요구투쟁과 강력한 투쟁력에 기반한 부문별 집단교섭을 통해 총력투쟁을 조직해 나간다.

③ 2000년 10월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토대구축과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연맹 창립과 함께 다져온 IMF 한파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도 휴게업 등으로 인한 조합원 감소와 이에 따른 조직력 약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자본측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현장조직력 강화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쟁으로부터 2000년 산별노조 건설의 토대를 구축할 때 힘있는 조직건설이 가능하다.

④ 민주노총 차원의 총노동전선 구축과 민중인대투쟁 등 공세적인 투쟁을 배치한다. 재벌해체, 노동법 개정, 실업대책 마련,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 반대 등을 위해 총노동전선을 구축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또한 연맹은 민주노총의 방침에 충실히 따르면서 대량실업과 물가폭등에 따른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중연

대투쟁을 전개한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철폐 등 정치적 과제에 대한 요구투쟁을 전개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모색한다.

3. 연맹의 역할과 과제

진척 노동운동에서의 연맹의 역할과 과제라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할

■ 총력투쟁을 전개하기
 ■ 위해서는 요구의 통일
 ■ 과 더불어 공동투쟁이
 ■ 배치되어야 한다. 중앙
 ■ 차원의 투쟁본부와 지
 ■ 역별 투쟁본부 구성, 공
 ■ 동투쟁일정 설정 등 연
 ■ 맹차원의 일사불란한
 ■ 방침 하에 투쟁을 준비
 ■ 해야 한다.

수는 없다. 연맹은 노동조합조직이고, 당면한 현실에 근거하여 변화를 모색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과제로서 주어지는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현실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실천 과제 정도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1) 총력투쟁을 통한 고용안정과 생존권 시수

1987년 이후 10년 동안 이루어온 노동자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연맹소속 노조의 1998년 입단부에서 실질임금삭감률이 약 20%에 달한다. 이러한 생계위험뿐만 아니라 단협상 노조활동과 관련한 개악을 자본측에서 공공연하게 들고 나오면서 현장조직활동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1999년에는 투쟁없이 쟁취했다는 각오로 "노조사수와 생존권



1999년은 처음부터 연맹차원의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공세적인 대응을 전개해야 한다.

보장 및 시수'를 내걸고 조합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성과있는 투쟁을 만들어 내야 한다. 특히 1999년에는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자본에 맞서는 투쟁과 함께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강력한 투쟁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한다.

1998년 임단부가 회사측의 임금반납과 삭감을 요구하는데 맞서 노동조합은 빼앗기지 않기 위한 수세적 대응이었다면, 1999년은 처음부터 연맹차원의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공세적인 대응을 전개해야 한다. "고용이나 임금이나" 라는 선택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

존권을 절대로 내줄 수 없다는 강력한 투쟁결의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2) 현장활동의 강화와 노조시수

현장조직활동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1987년 민주노조운동 시절의 전통으로 들어가 조합원과 간부가 함께 현장활동을 하며 민주노조를 만들고 단결투쟁하던 조직활동의 풍토를 세워야 한다.

지금 자본측의 신경인전략으로 현장조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이런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회사의 치밀한 관리체계

속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되면서 노동조합을 맡으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대량실업 사태와 자본측의 노조탄압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지고 있다.

1989년도에 조직노동자가 198만명(19.8%)으로 최고조에 달했으나, 이후 조직율이 떨어져 1997년말에는 148만명(12.2%)선까지 내려갔으며, 1998년말에는 이미 10%대로 떨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실업자와 비정규노동자 등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현장활동 강화없이 정규직 대기업 중심의 노조활동으로는 더 이상 조직확대강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된 것이다.

3)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정규직 대기업 중심의 기업별노조를 뛰어넘어 산별노조 건설로 하루빨리 나아가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을 비롯한 사회제도 개혁으로 생존권을 확보하는 투쟁을 강화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앞당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안의 활발한 토론으로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세력화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일과 함께 일상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단위노조-산별연맹-민주노총의 조직을 위상에 걸맞게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들의 현장토론을 통해 현장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활동을 수행하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는 조직활동의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산별노조가 만들어지더라도 관료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결국 그 조직은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하는 관료집단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산별노조 건설시기도 매우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다. 2002년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강력한 투쟁력을 갖는 조직을 건설하지 않고서는 노조활동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의식이 계급의식과 정치의식으로 무장되지 못하고 종업원의식에 머물러 있는 정도이다. 기성 정치권에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요구와 지향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노조운동 진영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1999년 한해동안 최소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전조합원 교육이나 선전을 통해 연맹차원의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세력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